

반복되는 재난 시기 과로사, 3.11의 교훈은 활용되고 있는가?

곤노 하루키 POSSE

올해 1월 1일 노토반도 대지진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수도 등 생활 기반이 복구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여러 분야에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구 작업에 투입된 행정 직원들의 과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본 이시카와현 와지마 시의 행정 직원 중 77%가 한 달 동안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 이른바 '과로사 한계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시카와현의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대규모 지진을 포함한 대형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지역 공무원의 과로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실제 복구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중 과로사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를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과 비교해보자.

재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과로사”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줬으며, 복구 작업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하기도 했다. 재해 발생 10년 만에 처음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지방 공무원 중 업무상 재해는 128건, 과로로 인한 사망(자살 포함)은 4명이었다.

지방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공무원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제염 과정에서 제거된 토양 보관 시설 설계 사업에 참여했던 환경부 직원(당시 28세)은 월 96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강요당한 후 우울증을 앓았고,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이 “과로사”인

지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사망자의 가족이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산재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갑작스러운 업무량 과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해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일본 대지진처럼 광범위한 재난에서 공무원 과로사 사망자가 단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엄청난 수의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2020년 7월 규슈 집중호우 당시 구마모토현 공무원 300여 명이 한 달 동안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매년 여러 지역에서 집중호우, 태풍 등 “기록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 의사, 공중보건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 문제도 불거졌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로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과로사마저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평상시에 충분한 인력과 지원 시스템을 미리 확보하면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로사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과로사가 반복되어 온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직원의 건강을 소홀히 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원 과로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다. 2018 회계연도에는 일본 전체 지방 공무원 중 4.8%가 월 45시간 이상, 0.3%인 약 3만 9천 명이 월 100시간 이상 초과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과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이는 “행정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1994년 328만 명이던 지방 공무원 수는 2022년 280만 명으로, 약 30년 만에 15% 감소했다. 평상시에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행정 직원들은 장시간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 이러다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과로사가 발생한다.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한 공무원 과로사, 우울증 등 노동 문제는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이다. 과거의 “교훈”을 살려야 한다. 

*이 글은 2024년 3월에 곤노 하루키가 일본어로 작성하여 발표한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